

“민주노조 금속노조만 빼고, WITH 포스코”

포스코 무노조 경영 분쇄, 비정규직 철폐 결의대회 ... 노조, “포스코 용광로 앞에 금속노조 깃발 세운다”



‘with 포스코’에 노동조합도 시민도 없었다. 일제에 강제노역 당한 노동자들의 피땀의 대가인 대일 청구권 자금으로 세운 포스코는 노동조합을 부정하고 하청노동자를 차별하고 있다. 오늘도 포스코 노동자들은 일제 강점기 때처럼 언제 죽을지 모르는 현장에서 일하고 있다.

민주노총 경북지역본부와 금속노조는 6월 24일 경북 포항 포스코 1문 앞에서 ‘무노조 경영 분쇄, 비정규직 철폐, 포스코 공공성 쟁취 경북 노동자 결의대회’를 열었다. 민주노총 경북지역 노동자들

과 노조 포항, 경주, 구미지부 조합원들은 결의대회에 앞서 포스코 정문에서 1문까지 행진을 벌였다.

금속노조 포스코 원하청 노동자들은 “50년 무노조 경영 철폐와 원·하청 노동자 차별 금지, 불법 파견 철폐”를 촉구하며 행진했다.

행진을 시작하며 황우찬 노조 포항지부장은 포스코를 향해 “노조할 권리와 사회적 역할을 위해 금속노조와 대화에 나서라”라고 촉구했다. 황우찬 지부장은 “포스코가 이를 거부한다면 금속노조 포항지부는 어떤 희생을 치르더

라도 끝까지 투쟁하겠다”라고 선언했다.

“금속노조 이름으로 포스코 용광로 앞에 서겠다”

김호규 노조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이번 임기 안에 금속노조 이름으로 포스코 용광로 앞에 서겠다”라고 약속했다. 김호규 위원장은 “오늘은 노조할 권리를 위해 공장 앞으로 출발하는 날이다. 자식들에게 포스코 민주노조를 자랑할 수 있는 부모가 될 수 있도록 투쟁하자”라고 격려했다.

김호규 위원장은 “포스코의 무노조 경영은 수치다. 포스코가 외치는 워드 포스코는 함께 하자는 실체가 없다. 상식의 노사관계를 바탕으로 포스코의 향후 50년을 위해 금속노조와 대화하자”라고 제안했다.

금속노조와 포항지부는 6월 18일, 포스코가 안전예산 1조 1,050억 원을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도대체 알 수 없다며 “산업재해 사전 예방과 사후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공개 제안했다.

김태영 민주노총 경북지역본부장은 대회사에서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는 공장 앞에서 멈췄다”라고 개탄했다. 김태영 본부장은 “경북지역 노동자들은 포스코 문밖에서 기다리는 이유로 공장 안에서 벌어지는 노조 탄압에 연대하지 못했다”라며 자책했다.

김태영 본부장은 “노동 3권 없는 민주주의는 민주주의가 아니며 노동 3권은 거리가 아니라 공장 안에 있어야 한다. 포스코에 민주노조를 세우는 길이 민주주의의 일보 전진이다”라고 결의를 높였다.

김명동 포항시민단체연대(준) 대표는 포스코는 포항 시민의 안전은 안중에도 없다고 비판했다. 김명동 대표는 “6월 13일에 이어 16일에 포스코 안에서 불이 나 검은 연기가 포항 하늘을 뒤덮었지

만, 포스코는 어떤 해명도 내놓지 않았다. 그 연기에 어떤 유독물질이 들어있는지 몰라 시민들은 불안에 떨었다”라고 질타했다.

포스코 원청과 하청 노동자들은 한목소리로 노조할 권리와 민주노조 사수를 결의했다.

“포스코지회 최후의 1인까지 민주노조 사수”

원민호 노조 포항지부 포스코지회장은 “적지 않은 조합원들이 포스코 자본의 회유와 강압으로 노조를 탈퇴했지만, 지회는 조합원 한 명이 남을 때까지 민주노조 사수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라고 다짐했다.

원민호 지회장은 “대일청구권 자금으로 만든 포스코다. 1945년 광복의 8월 15일 처럼 포스코 노동자들의 가슴에서 금속노조 깃발을 꺼내 흔들자”라고 결의를 높였다.

백일중 노조 포스코사내하청지회 화인텍분회 부분회장은 “포스코는 산재 예방을 위해 씨씨티비를 설치했다고 한다. 하지만 산재가 나면 씨씨티비 영상을 악용해 노동자에게 사고의 책임을 뒤집어씌우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백일중 부분회장은 “코로나 19를 핑계로 원가절감을 한다며 하청업체에 작업비를 줄이겠다고 통보했다. 이마저

도 공식 절차 없이 밀실에서 밀어붙이고 있다”라고 폭로했다. 백일중 부분회장은 “포스코는 당장 사내하청 노동자 조합활동 탄압을 중단하고 국민기업답게 비정규직 없는 공장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포스코는 코로나 19 사태를 핑계로 연차휴가 강제 사용과 휴업, 하청업체 인원 3년 동안 15% 감축 등을 일방 발표했다. 포스코 인원 감축 계획을 실행하면 3년 안에 2,700여 명의 하청노동자가 쫓겨난다.

포스코는 지난 2018년 산소 공정 작업 중 노동자 네 명이 한꺼번에 목숨을 잃는 참사가 벌어지자 “2020년까지 1조 1,050억 원을 안전 업무에 투입하겠다”라고 발표했다. 포스코 감사보고서와 이사회 의결 사항 어디에도 ‘안전예산’이나 ‘안전예산 증액’이라는 문구를 찾아볼 수 없다. 포스코에서 지난 3년 동안 70여 건의 산재 사고가 일어났고 아홉 명이 사망했다.

금속노조는 포항지부는 오는 7월 말 최정우 포스코 회장 취임 2주년 대응 투쟁과 포스코 공공성 강화를 위한 지역·시민사회 대토론회 개최, 9월 국정감사 대응 투쟁, 10월 금속노조 집중 결의대회 등의 투쟁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